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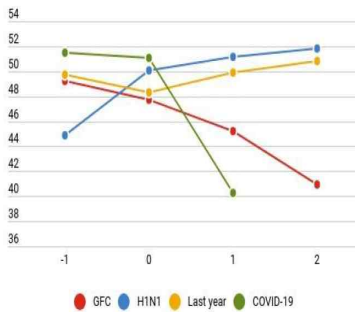
제 목

IMF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*

* IMF Chief Economist인 Gita Gopinath가 IMF 홈페이지에 게시(3.9일)한 「Limiting the Economic Fallout of the Coronavirus with Large Targeted Policies」의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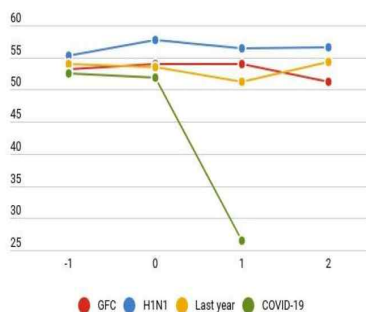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는 과거 위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급 및 수요에 충격을 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(substantial targeted policies)이 필요
 - 동 정책의 목적은 일시적인 위기가 영구적인 실직이나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
 - 현 상황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므로, 국가 차원에서 의료·보건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재정을 사용할 필요
 - 개인보호 장비 구입, 코로나19 관련 모니터링 및 진단 시행, 병상 확보 등이 이에 해당
 - 한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은 여행 제한, 휴교 및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, 이런 조치는 의료·보건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
-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, 이로 인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
 -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동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 국가들에서 가시화되고 있는데, 2월중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활동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
 - 벌크선 운송비용은 과거 전염병 유행시기나 9/11 테러의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, 금번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

위기 전후 중국의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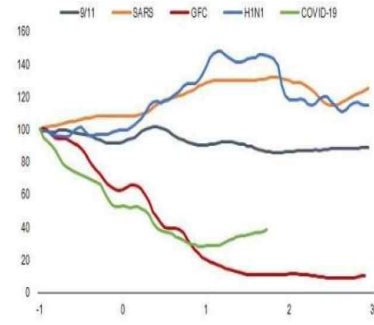


Sources: Haver Analytics; and IMF staff calculations.
 Note: The x-axis shows the months elapsed since the indicated event, with t=0 the initial impact month. Specific start dates by event are: COVID-19 = Coronavirus Disease 2019 (January, 2020), H1N1 = 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 (April, 2009), GFC = Global Financial Crisis (September, 2008), and last year = January 2019.

위기 전후 중국의 서비스업구매관리자지수



별크선 운임지수



Sources: Haver Analytics; and IMF staff calculations.
 Note: The x-axis shows the months elapsed since the indicated event, with t=0 the initial impact month. Underlying data are at daily frequency. Specific start dates by event are: COVID-19 = Coronavirus Disease 2019 (January 11, 2020), H1N1 = 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 (April 15, 2009), GFC = Global Financial Crisis (September 15, 2008), SARS =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(November 16, 2002), and 9/11 = (September 11, 2001).

(공급 및 수요 충격)

□ 코로나19의 확산은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

○ (공급 충격) 간호를 위한 휴가, 자가격리 등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에 따른 부품확보의 어려움은 기업의 생산에 차질을 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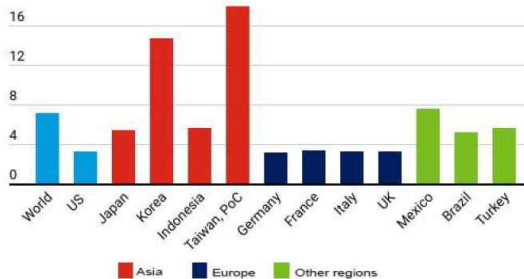
— 중요한 중간재 수출국인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감소는 여타 국가의 경제활동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○ (수요 충격) 수입 감소, 전염에 대한 공포 및 불확실성 확대는 경제주체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— 이로 인한 효과는 특히 여행·관광산업에서 심각한데, 지난 2.20일 이후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항공사 주가는 9/11 테러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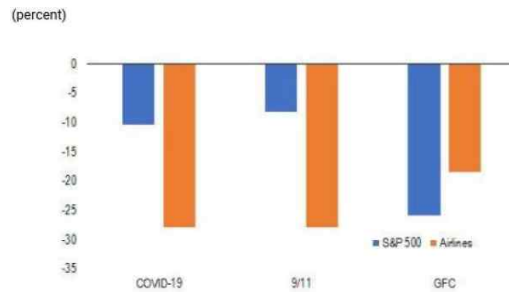
— 소비자 및 기업의 심리 악화는 수요감소를 예상하는 기업들의 투자 및 지출을 축소시키고, 이는 기업들의 사업중단과 근로자의 실업을 야기할 수 있음

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 비율¹⁾



주: 1) 부가가치에 대한 비율

위기 발생 후 항공사 주가 변화¹⁾



주: 1) 위기 발생 후 10일 기준

(금융 효과와 전염)

- 은행들이 소비자와 기업의 차입능력을 의심하면서 차입비용의 상승과 금융여건의 긴축이 발생 가능
 - 차입비용의 상승은 부채의 만기 연장실패 위험을 높여 수년간 저금리 시대에 축적되어 온 금융 취약성을 노출시킬 수 있음
 - 특히 신용의 축소는 공급과 수요의 충격에 따른 경기 하강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
 - 충격이 다수국가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미쳐 국제 무역 및 금융 연결성, 글로벌 경기 하강,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
 - 대외금융(external financing)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이나 일시적 자본 이동 제한조치 등을 필요로 하는 급격한 자본유입의 중단(sudden stops)이나 무질서한 금융여건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

(맞춤형 경제정책 필요)

- 특정 부문의 극심한 충격 등 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은 고통 받는 가계와 기업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재정·통화·금융정책이 필요
 - 공급 차질(disruptions)과 수요 급감으로 타격을 받은 가계나 기업은 현금 지원(cash transfers), 임금 보조, 세금 경감 등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
 - 이탈리아의 경우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세금 마감일을 연장하고 일시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한 임금 보충기금을 확대
 -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임금 보조금을 도입하는 한편 양육 및 구직수당을 인상했으며, 중국의 경우 사업체의 사회보장세 기여분에 대한 일시 납부 면제를 실시

— 일시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 수급기간의 연장, 수급혜택의 확대, 수혜대상 기준 완화 등 실업보험을 일시적 강화할 필요

- 중앙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돕기 위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,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한 일시적 맞춤형 신용보증 제공도 가능

— 한국의 경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과 신용 보증을 확대

- 금융여건이 상당히 긴축되어 뚜렷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정책금리 인하나 자산매입 등 통화측면의 부양조치는 금융시장 지원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며, 재정측면의 부양조치도 총수요 제고에 도움이 되겠으나 경영 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임

□ 광범위한 유행병의 확산, 경제적 연결성, 경제활동과 금융·원자재 시장시장에 미치는 신뢰 영향을 감안할 때 국제적 대응이 긴요

- 보건능력이 취약한 국가들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노력할 필요
- IMF는 저소득 신흥시장 국가들을 위해 500억달러 상당의 긴급금융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출제도를 통해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할 준비